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최찬규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9-203 |
|----------|-------|

발의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발 의 자 : 최찬규 의원 외 12명

1. 주 문

-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고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함.
-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2만톤을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하고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해저터널 공사가 완료되면서 곧 현실화 될 전망이다.
- 안전성이 미확보된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될 경우 주변국가 국민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특히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수 있음.
-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방법에 있어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와 협의 하여 충분한 검증절차를 이행 해야 할 것임.

3.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 결의안 : 별 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안산시의회는 74만 안산시민과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 규탄한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하여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1년 4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32만톤을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낼 해저터널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방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해 세슘을 비롯한 62종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정화되지 않는 삼중수소(트리튬)는 반감기가 12.1년에 불과해 2011년 발생한 동일본 지진 이후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져 바닷물로 희석한 후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조사와 분석만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020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삼중수소 외에도 오염수에 들어있는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며, 이 핵종들은 바다에 수만 년간 축적되어 먹거리부터 인간 DNA까지 영향을 끼쳐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 원전 사고로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전례는 없다. 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해양오염을 넘어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안정성이 미확보된 오염수는 방류가 아닌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국가적 범죄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재난이자 미래세대에게서 바다를 빼앗는 핵 위협이다.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계속 추진하면 국제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추진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 및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국민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적극 대처하라.

2023년 5월 31일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